

韓, 난민천국 되나... 現 2만 신청자, 3년내 12만명될 듯

법무부, 신청 외국인 132% 늘어
난민법 시행전 연평균 280명
시행 후 6978명으로 급상승
제주서 예멘인 신청자 12배 증가



법무부

올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1만8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337명)보다 132% 늘었고, 11일 현재 8262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다.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처음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반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 이전 누적 신청자 수 보다 약 6.3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 누적 건수가 올해 5만733명, 2019년 7만2509명, 2020년 9만8061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난민 인정 누적 신청 건수가 12만738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 등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급증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내전이 빚어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는 지난 한 해 42명에 비해 올해 5

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20명의 예멘인이 더 난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인이 제주에 오는 사례는 2015년 말까지 전혀 없었다가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올해 현재까지 561명 수준이었다.

제주에 오는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제주 등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는 다른 곳에 비해 입국 자체가 수월해 대거 몰려 들고 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웃 일본 등에서는 예멘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법홍 기자 jaker@metroseoul.co.kr

中기업계, 일자리 창출 10대 규제개선 건의

“서비스업 비중 낮아 구조재편 시급
규제 과감히 풀어 일자리 만들어야”

중소기업계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 등이 담긴 '일자리 창출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프랑스(79.2%), 미국(78.9%), 일본(7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제조업 비중은 29.3%로 프랑스(11.1%), 미국(12.3%), 일본(20.5%) 등 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일자리창출 위한 규제개혁 10대 건의과제〉

번호	건의제목	분야
1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3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4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금융
5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벤처투자
6	클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공동행위
7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노동
8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일자리
9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10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의료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 소비자의 후생 증진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진, 경미한 증상 등 원격의

료 허용 범위와 허용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수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독과점화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서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 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벤처부, VC 10곳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미래에셋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탈(VC) 10곳이 벤처펀드 운용사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5월 모태펀드 964억원을 출자해 2387억원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VC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10개 VC는 모태펀드자금에 민간자금을 매칭, 오는 9월까지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모태펀드160억원(결성목표 500억원)은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300억원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청년창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0억원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2개 펀드(출자요청 109억원, 결성목표 504억원)와 지방기업 투자 1개 펀드(출자요청 80억원, 결성목표 130억원)도 선정됐다.

현대기술투자의 경우 울산시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아 울산, 포항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에선 민간 대기업 등이 출자해 우선 결성하고 모태펀드가 후속 출자하는 벤처펀드도 등장했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민간투자 후원 방식 모태펀드 운용방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해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모태펀드는 이를 뒷받침해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도서지역 찾아 '모의 법정' 법무부, 진로체험 법교육

법무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전남 신안·완도 소재 유치원·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과 진로 체험 법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된 '찾아가는 도서지역 법교육' 프로그램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모의 법정'을 열어 진로체험과 법교육 기회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교육은 성인과 청소년, 유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중도중학교·유치원, 압해동초교·유치원, 약산중·고교, 고금유치원, 금일초교·유치원, 자은면사무소·중학교·유치원, 지명중학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교직원·주민(성인)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을 벌인다. /이법홍 기자



공공기관 실적평가 발언하는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철뉴스

코웨이, 완벽직수 '시루직수 정수기' 출시

코웨이는 기존 정수기 시장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2018년 전략제품 '시루직수 정수기(CHP/CP-7300R) (사진)'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30배를 높여 RO 멤브레인 필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수가 가능하다.

물을 마실 때마다 무료로 남은 잔수를 모두 배출하고 갖 정수된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유로비움 모드'를 탑재해 완벽한 직수를 구현했다.

시루직수 정수기는 'RO 멤브레인 필터를 탑재한 정수기라면 수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직수 방식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코웨이는 기존 시루(CIROO)필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CIROO 2.0 필터'를 개발했다.

CIROO 2.0 필터는 코웨이가 세계적인 화학소재기업 도레이와 공동 개발을 거쳐 특허출원한 필터다. 이 필터는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크기의 이온물질까지 제거하는 '인텐시브 액티브 텐스 레이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 또한 기존 CIROO 필터보다 면적을 6배 늘렸으며 정수량은

또 '자동배수 시스템'을 적용해 24시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수기 속 모든 잔수를 스스로 배출해 깨끗함을 유지한다.

정수기 위생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해 위생성도 강화했다. '투명 분리형 파우셋'을 탑재해 추출구의 오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분리 후 손쉽게 세척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시루직수 정수기는 렌탈로 구매 시 월 4만7000원(렌탈등록비 10만원 기준)이며 일시불은 220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선배기업인과 스타트업 간 정보교류 창구 생긴다

벤처기업협회, 26일 벤처ONE 포럼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오는 26일 저녁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상상라운지에서 '제4회 벤처ONE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벤처ONE 포럼'은 협회가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위원회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선배기업인과 스타트업 간 정보교류 및 소통 창구다.

이벤트 포럼은 '세상을 향한 스타트업의 사투리! 100초 스피치'와 대기업-벤처스타트업 협력 사업소개, 선배벤처기업인과 토크콘서트, 참가자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00초 스피치 시간엔 스타트업 5개사 내외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규제 애로, 경영어려움, 협력사항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100초 스피치 시간에 참여할 스타트업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